

'주4.5일제' 본격 속도... 내년 324억 투입, 도입 기업에 장려금

정부가 본격적으로 주4.5일제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한 지원 예산 324억원을 투입하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주4.5일제 추진이 담겼다.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이를 뒷받침할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연내 국회 제출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 근거 등을 담은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워라벨+4.5 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4.5일제 특화 컨설팅, 육



이재명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연내 발의...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워라벨+4.5' 시범사업 시행... 컨설팅 등에 예산 324억원 반영

"노동시간 단축, 현장 혼란 없도록 사회적 대화로 추진할 것"

야기 10시 출근제 등을 도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324억원이 편성됐다.

노동부는 "주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채용으로 이어지는 기업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교대제, 장시간 노동 사업장 등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해 현장의 도입사례를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현장 혼란 및 갈등이 없도록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민주, 소속 의원들에 '연행 주의령'... "사회적 물의 시 엄중 조치"

조승래 사무총장 17개 시·도당에 행동 지침 발송

한 시기"라며 "또 오는 10월 29일부터 진행되는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국력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당정 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당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들은 지역위원회, 언론 및 유튜브, 개인 소셜미디어(SNS)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연행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연행을 한 경우 중앙당은 즉각 엄중 조치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2차 가해성 발언 논란이 제기된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하는 등 당내 '실언 리스크'로 홍역을 치렀다.

/뉴시스

문재인 "9·19합의 복원, 가장 시급"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하루 앞두고 기념사 "하노이 불씨 살아있어... 김정은, 결단 보여주길" "尹정부, 공직자 사법 탄압... 명예 속히 회복되길"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고 18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의 기회가 올 것"이라며 이치럼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모든 평화 프로세스의 전제조건"이라며 "남북한 사이에 당장 전방위적인 대화 재개가 어렵다면,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부터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 발언에 대해 "연내에 김정은 (북한 국무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요청한다"며 "남북의 정상이 함께 선언문에 서명하며 나는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과 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며 "김 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나는 오늘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 북, 미 정상들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간절히 바라고 축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북한 어민 송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 및 감사를 벌인 사실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민주정부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외교안보 분야 공직자들에게 사법적 탄압을 자행했다"며 "전 정권 죽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기획 수사, 억지 기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광주교육감 진보 후보들 단일화 첫 회동... 선거구도 주목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성향 예비후보들이 단일화에 나서 이정선 현 교육감과의 일대 일 선거 구도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뉴시스 취재 결과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지난 17일 오후 7시에 광주시내 모처에서 첫 회동을 했다.

이들은 2시간 가량 이 교육감의 재선을 막기 위해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단일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단일화 방식과 시기, 절차 등은 향후 구성되는 단일화 추진 기구에 일임되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세 예비후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단체 문자방을 개설해 선거나 교육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직함 논란에 대해서는 세 예비후보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세 예비후보는 이 교육감 취임 후 발생한 감사관 채용비리로 3년이 넘도록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광주 교육공동체의 위상과 사기가 떨어진 데 대해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김용태·오경미·정성홍 예비후보 첫 만남 단일화 필요성 공유·추진위 구성시 동참 이정선 교육감 사법리스크 단일화 명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왼쪽)과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가운데),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17일 오후 광주시내 모처에서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이 교육감까지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교육수장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도 단일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 예비후보는 진보 성향인 장휘국 전 광주시교육감 재임 중 전교조 지부장을 허거나 시교육청 간부를 지낸 공통점이 있다.

전교조와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등 지지 세력과 교육철학이 비슷한 점도 단일화의 명분이다.

광주 교육계 한 관계자는 "단일화가 자칫 야합이나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교육철학, 명분이 뚜렷하면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세 예비후보가 첫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주·전남 2년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0건'

김문수 의원, 수도권 5년 간 최대 270억 지원... 전남·광주 0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고) 육성 선정 과정에서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서 전남, 광주, 울산, 세종 소재 학교가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교육청·지

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한 뒤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연합체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성화고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내 인력난 등 지역 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정부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육성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년 선정된 학교 소재지는 ▲서울 2개교, ▲경기 1개교, ▲인천 3개교, ▲부산 1개교, ▲대전 2개교, ▲대구 1개교, ▲강원 1개교, ▲충북 1개교, ▲충남 2개교, ▲전북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1개교, ▲제주 1개교였다.

김문수 의원은 "소멸 위험지역 1위인 전남이 협약형 특성화고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지역 소멸의 위험은 더 커진다"며 "사업 목적과 배경이 지역 소멸 대응 및 지역인재 육성에 있는 만큼 앞으로 선정 시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당 지원 금액을 조금 줄더라도 선정학교를 늘려 지역별 고르게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진도아리랑몰

우리가족 안심먹거리

Organic & nature

Fresh food 신선한식품

www.jindoarirangmall.com

고객센터 061. 542. 9631